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등 참조).

바) 한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 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대법원 2018. 10. 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의 유형을 구별하여 그중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은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과정 내지 공정과 관련된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국한되고, '상표권'은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 사용'이나 '담배 완제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에 국한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이 된 권리, 즉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한 대가로 하여받은 권리가 무엇인지에 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은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C의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권리에는 I